

【서평】

일제강점기 위로부터의 식민도시 건설  
-『일제의 식민도시건설과 자본가』  
(김경남 저, 도서출판 선인, 2015)

차 철 욱\*

1.

평자가 저자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원에서이다. 한 해 먼저 대학원에 입학한 저자는 같은 시대 유사한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평자에게는 아주 좋은 길 안내자였다. 한국 근현대 경제사와 관련한 후배의 꼬장꼬장한 질문에도 항상 선배로서의 여유로움과 연구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저자가 석사논문으로 쓴 ‘조선방직’연구는 본 저서의 출발점이였다. 저서에서 발견되는 일제의 부산 공업지구 계획이나 전시공업정책에 대한 인식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1998년부터 일본 교토대학에서 풍부한 식민지시대 연구자와 자료를 접할 수 있었고, 곧바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면서 본 저서의 골간이 된 박사학위논문(「일제하 조선에서 도시건설과 자본가집단망」)을 발표하였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그동안 파편적으로 연구되었던 식민도시 건설과 자본가 성장의 상관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저자는 일본 국문학자료관과 學

---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習院大學, 호세이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논리로서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도시계획과 정책, 자본가 네트워크에 연구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저자의 그간 연구이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풍부한 자료 수집과 독해가 본 저서로 집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자는 이 저서가 한 연구자의 오래되고 집중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본 저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당시 조선총독부와 제국일본의 도시계획과 군사관련 자료의 활용이다. 오늘날 근대 자료는 대부분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연구자들의 활용이 편리하지만, 저자가 연구에 집중하던 십 수 년 이전에는 자료 수집은 몸이 고달플 정도로 부지런해야 가능했고, 거기다가 다양한 인맥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저자의 성실함과 친화력이 본 저서를 구성하는 힘이었다.

본 저서 구성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저서의 중심 내용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축을 기준으로 보면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는 개항기, 한일 합병 이후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지배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1930년대 초,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을 병참기지화로 활용하는 시기로 나누고 있다. 역사에서 시간을 탐색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저자처럼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리듬을 파악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어떤 의도이든 간에 시간은 역사를 구성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저자가 활용한 시기구분으로서 시간 또한 특정 시간대를 구성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동일한 그 무엇, 즉 구조가 지니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각 시기 별로 식민도시를 건설한 일본 제국과 일본인 자본가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고 있다.

본 저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공간은 부산이다. 1876년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항된 부산은 일본인의 이주나 근대적인 요소의 이식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본이 부산을 개항장으로 만든 이후 전략적 목표인 군사시설의 구축 양상, 한일합방 이후 거점도시화 과정, 전시체제가 일본의 조선병참기지화와 부산 도시계획의 상관성에 대해 일관된 논지를 구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부산을 중심에 두되 부산 지역사에만 한정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조선 전체를 시야에 넣기도 하고, 자본가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전략과 일본 제국 경제정책을 포괄한 식민도시 전략과 자본가 네트워크를 설명해 내고 있다. 전체와 부분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간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저서의 구성이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국 일본-조선-부산이라는 다양한 단위의 관계를 전제한 서술 과정에서 발견되곤 하는 아쉬움이라 생각한다.

## 2.

저자가 식민도시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을 바로잡고,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거점, 병참기지의 확보라는 식민지 수탈체제의 강화, 즉 ‘수탈론’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식민도시는 철저히 일본 제국의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건설되었고, 이런 기회를 배경으로 식민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일본인 자본가의 축적과 공업화가 가능했다는 기초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식민도시는 일본 제국의 이해가 관철된 ‘식민성’이 가장 잘 적용된 대상이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수탈 메카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식민도시의 범주를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공업화와 자본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식민도시의 연구를 자본축적의 구조를

밝히는 한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저서가 내세우는 키워드는 군사전략적 거점으로서 식민도시, 그 내부에서 자본축적의 계기가 되는 공업화와 이를 주도하는 자본가로 설정하고, 이들 요소들이 결합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군사적 성격을 지닌 물리적 공간으로서 식민都市는 개항장, 거점도시, 공업도시의 성격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항장 부산의 식민도시로의 변화에 대해 일본인의 토지확보와 시가지형성, 군사전략적 시설의 구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개항 직후부터 부산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욕망과 이들에 의한 거류지와 주변지역 조선인 토지의 획득 과정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특히 통감부 이후 본격화된 매축사업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부산을 단순한 근대도시로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연관시켜 초기 일본인들의 토지획득과 일제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결합되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해군용 석탄 저장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부산의 절영도 조차 계획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전략적 목적과 일본인 토지의 획득, 시가지건설 등과 관련해 개항장 부산만이 아니라 인근의 진해만이나 마산의 사례가 본 연구에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 저자의 논리에 설득력을 제공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개항장 부산으로 한정된 공간의 도시건설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와 거리가 있는 진해만 이주어촌과 마산포 일대의 토지확보 논의에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논리적 산만함을 보인 점은 아쉽다.

한편 개항장 도시의 군사적 성격과 관련해 저자는 개항장 부산항에 설립된 공장 또한 동일한 성격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 시기 설립된 공장들 대부분은 정미업, 장유주조, 통조림 등 식료품공업이었는데 생산품은 부산 거주 일본인 소비에 대응할 목적도 있었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군수품 조달과 관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부산항이 원료나 설비의 운송을 위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서 일본의 전쟁 수행을 배후에서 지원할 수 있었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후 자료수집과 새로운 연구를 통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군수품 조달을 위해 부산항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했는가를 정리한다면 개항장 공업과 일본의 군사전략적 목표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한일합방 직후 1914년 부제 실시 이후 개항장과 내륙의 전통적 중심도시에 소위 ‘거점도시’를 만들었다. 저자는 거점도시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부산 정착 일본인들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조선 토지 불하와 시가지계획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일본인들이 기존 거류지 토지를 불하받거나 부산 바닷가 분할 분쟁에서 소유권자로 입증 받으면서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근거를 국가기록원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 일본인들의 토지확보가 일제의 군사전략적 성격을 지닌 부산의 각종 항만시설공사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1910년대 부산항에 건설되는 부두공사, 부산축항공사, 부산진매축공사, 영도매축공사, 남항매축공사, 도시 내 도로망과 전차궤도 부설과 같은 교통망 정비, 상하수도 건설 등 부산시가지사업의 다양한 유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부산항만시설공사가 지니는 군사적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야만 거점도시 부산이 지니는 역할이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점도시 시기 부산항과 관련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1918년부터 1922년 사이에 전개된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과 수송이다. 이 시기 부산항에서는 군사수송에 필요한 시설이 대거 확충되었다. 1부두 확장, 화물전용 2부두 신설 및 확장, 이와 연결된 철도·도로공사, 군수물자 양륙을 위한 부산진매축지 활용 등이다. 시베리아 출병과 부산항의 상관관계 규명은 거점도시 부산이 지니는 군사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앞으로 저자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저자는 거점도시의 변화를 공업화의 진행과 부역확장을 연결해

서 설명하기도 한다. 1910년대 후반부터 조선에는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과 노동집약적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거점도시 부산에도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활용한 공장이 설립되었다. 면방직, 도기, 고무, 정미소, 철공소 등이었다. 설립된 공장의 입지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범일동 방면이었다. 이곳은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동래에 속한 곳이었는데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산부의 공업지대로 발달하게 된다. 이처럼 공업화와 도시공간의 변화라는 신도시 개발전략에 대해 저자는 재조일본인 자본가들이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했으며, 정치적 경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조선공업화의 유행에 편승해 상호출자방식인 호우카쵸(奉加帳)라는 투자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면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다만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한 지역 자본가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지역 자본가들의 네트워크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작동한 방식에 대해 좀 더 분석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910년대 후반 상업회의소 회두(會頭) 자리를 두고 오이케, 하자마, 카시이가 격렬하게 대립했다든지, 1920년대 후반 부산에서 치열하게 격론을 벌인 ‘전기부영화운동’ 때 소위 電閥派와 反電閥派 사이의 싸움이 있었다. 이처럼 지역 자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도 존재했지만, 이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분석이 첨가될 때 식민도시 건설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을 전진대륙병참기지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업도시’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시가지계획령」(1934.6.20)을 발표하고, 조선의 후방 기지에서 안정된 군수공급체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시가지계획은 도시화와 공업화를 통한 대륙병참기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

고 일본의 조선 지배전략 변경에 따라 군수공업 중심의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시가지계획과 도시정비가 추진되었다. 저자는 이 시기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40년에 일본 본토의 국방국토계획에 따라 개정되면서 좀 더 군사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변화에 따라 부산의 시가지계획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선총독부 문서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부산시가지계획의 주요 특징에 대해 저자는 첫째 공업지구와 군사시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망(도로 및 철도)정비, 둘째 조선총독부가 부산시가지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해만요새군사령관의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부 의견의 반영, 셋째 부산을 요새지대 방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녹지, 풍치, 공원지구를 결정하여 부산을 방공도시로 기능토록 계획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군사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전시 막바지에 부산은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중심 군사도시로 변화하였다. 인근 도시에 배치되었던 군 시설이 부산으로 집중하였고, 여기에 맞춰 토지구획정리와 군사도로가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저자는 조선과 부산의 시가지계획이 일본 본토의 도시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른 식민지적 특성을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시체제기 도시계획은 조선의 공업 또한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조선총독부는 전국을 6개 공업지대로 구성하였다. 부산이 포함된 남부공업지대는 부산요새지대의 군수조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면서 추진되었다. 저자는 이시기 부산의 공업을 절영도공업지구와 부산진공업지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자에는 조선업, 법랑, 살충제 제조업 등이, 후자에는 섬유, 식료품, 고무, 기계, 목재 공업이 위치했으며, 부산공업은 경공업 중심으로 군복이나 철로 만든 군수물자 생산과 보관 및 운송을 위한 지위가 부여되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전시체제기 도시화와 공업화를 조선과 부산 자본가들의 또 다른 축적 기회였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공장지구 형성으로 부산의 일본인 자본가들

과 일본 독점자본가들은 개발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고, 공업화에 따른 투자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한 자본가들은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저자는 전국 주요 자본가를 다양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가 업종별 혹은 재벌별, 국적별 등 기준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이런 분류가 지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부산의 자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구분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분 기준이 분명히 했으면 한다. 특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몰락한 사례(안희제, 윤현진)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안희제의 백산상회가 해산된 것은 1928년 1월이고, 윤현진은 경남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상해로 넘어간 것은 1919년 일인데 시기적으로도 부적합하고, 또 부산의 대표적인 자본가로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좀 더 면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저자는 본 저서를 통해 일제 식민도시의 성격을 ‘식민성’으로 규정짓고 있다. 저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이 만들어 낸 군사전략적 관점과 도시계획, 식민도시를 지배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자본가의 자본축적 방식을 보건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가 시종일관 부산의 식민도시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이라는 단위의 관점에서 역으로 일본 제국과 조선총독부의 식민도시 전략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다. 현장 당사자들의 대응논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조나 정책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구성원들의 대응방식에서 역사적 사건에 마주선 인간의 능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지역민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독부의 정책이 정책 결정문서처럼 현장에서 제대로 관철되었을까, 아니면 현장 구성원들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본 저서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25년 거점도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주에서 부산으로 경남도청의 이전과 관련해 진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격렬한 저항,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반대운동은 분명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순탄하게 관철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관점과 시선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민족이라는 요소보다는 동일한 삶터에서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중앙의 정책에 균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식민지 시대의 지역이 지니는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 말 부산부의 행정구역은 두 차례 확장되었다. 1936년 부산시가지계획의 실시에 따라 동래군 서면 전부, 사하면 암남리(송도)와 1942년 10월 동래군 전역이 편입되었다. 부산부회, 부산번영회, 부산의 언론기관 등은 부역확장을 환영하는 일색이었던 반면, 편입 지역에 살고 있던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조선총독부와 부산부의 정책에 대해 현지민들은 일본인과 조선인과 같은 민족별 구별보다는 생활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움직였다. 이처럼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에 대응하는 민중의 요구는 총독부-부산부-삶터 등과 같이 각 생활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두 사건의 사례에서 도시계획의 결과는 조선총독부와 부산부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역과 지역민들의 대응방식은 식민지배의 논리에 저항하는 틈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다음은 아래로부터의 도시건설 논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 되었을까이다. 특히 본 저서에서 저자는 식민도시의 개념에 공업화와 자본가를 포함하고 있다. 책을 읽는 내내 아쉬운 부분이었기는 한데 지역을 단위

로 강고하게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본가들이 공업화만이 아니라 도시화 과정에서도 자본축적을 실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토지불하,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의 확보라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도시개발계획에 적극 개입했을 것임은 쉽게 추측 가능하다. 실제로 부산부회, 부산번영회,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부산의 도시계획에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매축사업, 도로망건설, 부산대교 건설, 시구개정사업 등에 관심을 가졌다.

일제강점기 지역은 단순히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공간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발도 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유도하면서 지역 구성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요구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이 지역의 실재이며 가능성이기도 하다.